

### 김동철 의원 ‘약대 신설, 권력형 비리’ 발언 물의

# “불교 모독, 의원직 사퇴 촉구”

## 조계종 “정치권 불교편혜 강력 대응” “민주당 차원 해명 촉구” 입장 밝혀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김동철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국대 약학대학(藥學大學) 신설에 대해 ‘권력형 비리’라는 주장을 내 놓아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교과부에 동국대 약대 신설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신설 대가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스님들을 내몰아 불교계를 친정부 성향으로 바꾸려 한 것”이라며 “검찰이 나서서, 약대 배정에 청와대와 여권 실세가 개입하여 동국대 약대 신설 압력을 가한 것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하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진 뒤 13일 열린 총무회의에서 총무원은 “종단 내 문제인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대해 정치권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악용하는 것을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면서 강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김동철 의원이 광주 ‘빛과 소금 교회’에 다니는 집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불교를 약의적으로 비하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과 100년 전통의 종립대학인 동국대를 모독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불교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원담스님은 “종단은 그동안 봉은사 문제는 직영사찰 지정이라는 지극히 종단 내부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권과 연계 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당부해 왔다”면서 “전혀 별개의 사안인 동국대의 약대 신설 문제와 봉은사 문제를 작위적으로 왜곡하며 검찰 수사를 운운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중대한 불교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담스님은 “김동철 의원은 본인 발언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오전 총무원 정례브리핑에서 기획실 기획국장 만담스님은 “김동철 의원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종단을 편혜하고 왜곡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담스님은 “김동철 의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전남사암연합회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13일 오전 총무회의에서 김동철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보고 받은 후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은 종단 내부의 문제이기에 인내하면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정치권에서 불교와 종단을 편혜하고, 비하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사 항의 방문키로

총무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항의방문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게 종단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었지만, 정세균 대표가 지방에 머물고 있어 14일 면담을 할 예정이다. (4월13일 현재) 김동철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2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순학규 전 경기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직후 한광원, 안영근, 정봉주, 김부겸, 조정식, 신학용 의원 등과 함께 손 전 지사의 서대문 사무실을 지지방문하기도 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회계사 주지 수경스님 임명  
임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견실에서 직할사찰 서울 회계사 주지에 수경스님(오른쪽)을 임명했다.

### 현장에서

## 주지는 지역 불교계의 얼굴

본·말사주지 인사규정이 개정되면서 두 가지 주요 정책이 법적 근거를 얻었다. 우선 초임주지자격연수 실시. 처음으로 조계종의 말사 주지 소임을 맡고자 하는 스님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원은 오는 6월 초 더디 강화와 전문성 배양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열 계획이다. 인사규정 개정으로 직할교구 공찰에 우선 적용되는 주지인사고제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 말사 주지 품시 최고점인 ‘갑’ 등급을 받은 스님이 우선권을 얻으며 ‘을’ 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재임할 수 있다. 직무능력을 수치화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영섭 기자  
tuel@ibulgyo.com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총무원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요컨대 주지에 취임하기도, 계속 자리를 지키기도 전보다 까다로워진 셈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과 불립문자(不立文字)가 미덕인 절집에서 ‘숫자’에 연연해서야 되겠느냐는 게 일각의 불만이다. 그러나 순전히 마음과 마음끼리의 공감은 지

근한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알다시피 한국의 종교지형도는 불교에 그리 유리하지 않다. 타종교와 경쟁해야 하고 사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불신은 비슷한 크기로 상존한다. 사람들은 주지 스님의 품성과 행화를 통해 불교의 값어치를 가능한다. 바르고 슬기로운 스님에게서 바르고 슬기로운 종단을 본다. 더구나 한껏 영리해진 현대인들을 가르치려면 그들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법문에도 상담에도 중무행에도 능해야 한다. 지역 현안에 대한 불교적 대안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자비(慈悲)에도 기술이 필요한 시대다.

### 김충환 서울시장 예비후보 12일 조계종 총무원 예방

김충환(사진)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6월2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을 갖고 있는 김충환 예비후보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김충환 예비후보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민선 강동구청장을 세 차례 역임했고, 제17대에 이어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있다. 이날 김충환 예비후보의 예방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과 사서실장 경우스님, 박기련 특별보좌관이 배석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그동안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노회찬 전 의원(진보신당),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해 이계진 한나라당 강원지사 예비후보,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 정당 후보들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어 왔다. 이성수 기자

### ‘입적후 개인명의 재산 출연’ 동의

## 불국사 교구총회, 종단방침에 적극 동참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성타스님)가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적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내(內) 출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불국사는 지난 10일 44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교구총회에서 주지 성타스님은 “사후에 출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출연 범위도 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거주사찰, 법인 등으로 확대되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불국사 교구 차원에서도 종단 방침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날 교구총회에 참석한 총무원 총무국장 중민스님도 “일부 사찰사람의 스님들이 걱정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안을 살피면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출가하여 불가피하게 형성된 개인명의 재산이 종단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입법취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구총회를 개최해 동참을 결의한 본사는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상훈스님, 3월1일),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봉스님, 3월12일),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용산스님, 3월13일),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원행스님, 3월21일), 제5교구본사 범주사(주지 노현스님, 3월25일),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정여스님, 3월27일) 등 7곳으로 늘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사찰부동산관리령’ 입법예고

지난 3월25일 공포된 사찰부동산관리령의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시행령이 제정됐다. 시행령은 사찰부동산관리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사찰부동산관리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어 입법예고된 사찰부동산관리령(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사찰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경우(지목이 농지)에는 사인중여가등기, 유언공증, 함유등기를 완료하도록함 △종단목적사업기금 삭감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승인신청서류는 종단표준양식을 사용토록 명시함 △승인기간을 적정하게 부여하여 본사의 말사에 대한 심의(검토)를 강화함.

사찰부동산 수익금의 사용처는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불교회관(전법회관) 건립 △포교소 건립 △사회복지시설 건립

### 사찰부동산 수익금 사용처

- ▷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 ▷ 불교회관(전법회관) 건립
- ▷ 포교소 건립
- ▷ 사회복지시설 건립

회복지시설 건립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종단목적사업기금 삭감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찰부동산 전체가 공용수용으로 편입되는 경우 △해당사찰이 사찰로서 기능을 할 수 없어 사찰이전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소속, 대도,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입법예고를 거쳐 이 총령이 공포되면 2005년 7월15일 개정 공포된 사찰부동산관리령은 폐지된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해인사 의혹 규명 요구 해인사승가대학 동문회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원학스님)는 지난 12일 해인총림 해인사 관련 의혹의 조속한 규명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총동문회는 “작금의 해인사는 몇 가지 불미스러

운 문제로 인해 해인사뿐만 아니라 종단의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다”며 △의혹과 불신에 대한 해인사 주지 스님의 해명과 참회 △해인사 고불함 경매 건과 대구 도립사 문제 등에 대한 총무원의 철저한 조사 △정법을 손상시키는 방문판매 행위 중지를 촉구했다.

장영섭 기자 tuel@ibulgyo.com

## ‘온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하여’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생명을 경시하는 개발지상주의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명아래 우리 삶의 근간이자 생명수라 할 수 있는 강을 파헤치고, 무수한 못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의 허구와 생명파괴의 실상을 알려내고, 지난날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발생한 자연과 생명의 위기를 참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를 개최 합니다.

수륙대재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 주요식순

- 식전행사
- 명종
- 고불문
- 여는말씀
- 천도의식
- 동참사
- 문화공연
- 결의문
- 서원의 2배

### ◆ 주최

-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 추진위원회

### ◆ 문의

- 02) 720-1654 / 725-4277

### ◆ 후원계좌

- 농협 312-0035-9251-91김효종(불교환경연대)

## “생명의 강을 죽이는 4대강 사업 반대합니다”

천지는 나와 한 뿌리이며,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

- 벽암록 中에서 -



(before)



(after)

〈낙동강 고령교 부근〉

■ 일시 : 2010년 4월 17일 오후 3시 (2시 식전행사) /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